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1.11.1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라.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불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4. ~ 2022. 10. 24.)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

- 제4조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 내용 반영
-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 고려 사항 반영
- 제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2.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3.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한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
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성명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담당: 행정8급 백은정)
연락처	02-2600-619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2-38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안전관리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라.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 제7조)

□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9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당자명	백은정	전화번호	02-2600-619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조례안 해당 조례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정책개발 연구’가 가능하도록 성별, 연령, 장애여부·유형, 산업분야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성별 직종분리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집중 종사 분야에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정책은 건설업, 제조업 등 남성중심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돌봄 노동과 환경미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은 뚜렷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특정 분야를 기준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할 경우 성별, 연령에 따라서 산업안전 보건정책에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p> <p>○조례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p>			
	<div>※참고</div> <div>양성평등기본법</div> <div>[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div> <div>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생략)</div> <div>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div>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추가의견

-서울시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9년 3월 8일 가결된 바 있음. 일괄개정 사유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내용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존중해야 하며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통용되었던 용어이기 때문임(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10-00252,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또한, 본 조례명이 ‘노동안전보건’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4.(생략)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4. (생략) ② <u>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신설></u>	종합검토의견 참고
2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6.(생략)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6.(생략) ② <u>①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신설></u>	종합검토의견 참고
3	제7조(산업안전보건 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산업안전보건 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종합검토의견 참고

	<p>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3.(생략) ③~⑥(생략)</p>	<p>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u>성별을 고려하여</u>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3.(생략) ③~⑥(생략)</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22년 11월 3일 까지</p>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2년 10월 20일</p> <p>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p> <p>(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p> <p>안전관리과장 귀하</p>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